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1
----------	------

발의연월일 : 2020. 7. 9.

발 의 자 : 유동수 · 인재근 · 문정복
황운하 · 박 정 · 맹성규
김희재 · 홍성국 · 고용진
이해식 · 김민철 · 이태규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의 증가, 편의점·P
C방 등 야간1인종사자 사업장의 증가, 주취폭력·데이트폭력 등 생활주
변폭력의 증가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치안영역이 등장함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422명(2019년 기준)
에 달해 경찰 1명이 250~300명 정도를 담당하는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2015년 기준)의 치안서비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치안 사
각 지대를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으로써 관할
지구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지원관계를 맺고 지역 방범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약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있어 예산 지원

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조직하여 “○○읍 자율방범대”, “○○면 자율방범대”, “○○동 자율방범대”로 부르기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조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제2항, 제4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에서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함. 다만 자율방범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며 자율방범대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다. 자율방범대원은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현행법 체포·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그 임무로 함(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치

안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특히 자율방범대원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안 제9조, 제14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시·군·구의 조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복무 사항을 감독하되,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명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 중앙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을 소집할 경우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제2항).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 부상, 사망에 이를 경우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3조제3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 단체인 자율방범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설립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 조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조직도 가능하다.

②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자율방범대는 조직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으로 구성하며 대장, 부대장은 대원들 가운데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읍·면·동 단위로 조직·운영되는 자율방범대는 “○○읍 자율방범대”, “○○면 자율방범대”, “○○동 자율방범대”라 칭한다.

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단위로 자율방범대 연합대를 구성할 수 있고, 시·도 단위로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로 자율방범대 중앙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와 자율방범대 중앙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자율방범대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중 7)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7.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8.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4.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복장착용 등) ①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무 수행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
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순찰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율방범대원의 근무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치안행정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범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금지)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제5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복무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 업무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방법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연합회,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지역 치안업무 보조로 소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에 따른 임무수행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벌칙) 제9조제3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자율방범대로 본다.